



농해수위 여야 의원실에도 요구서 전달

협회, 국회찾아 AI 방역정책 바로잡기 호소



한국오리협회(회장 김만섭, 이하 협회)는 지난 1월 28일 국회를 찾아 정부의 AI 방역대책으로 인한 업계의 피해를

알리고 해결책 마련에 힘을 써달라고 호소했다. 협회는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비례대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을 찾아 정부의 비현실적인 AI 방역대책으로 인한 농가 피해와 가금산물의 소비자가격 급등 등의 문제점들을 설명하며, 시급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알렸다. 특히 이들은 최 의원에게 현재 정부가 ▲AI발생 농가 3km 이내 모든 가금류를 무차별 살처분하고 합당한 손실보상을 이행하지 않는 문제 ▲중계(종오리)를 다른 가금류와 똑같이 살처분 하는 상황 ▲일부 지자체가 가금농가들이 AI 발생 지자체 내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지자체로의 가금산물 이동을 금지하는 행위 ▲출하기간 단축(1일 출하) 행정명령 등의 문제들로 인해 발생한 다양한 유형의 현장 피해를 언급하며 청와대에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한 보고서가 제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승재 의원은 “AI 방역에 대한 손실 보상과, 예방이라는 미명하에 AI 발생 농가로부터 반경 3km 이내에 있는 가금농가들에 행해지고 있는 예

방적 살처분에 대한 현장의 피해 상황이 제대로 워선(청와대)에 보고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AI 발생시

지자체 간 경계를 넘지 못하는 현 상황을 포함한, 정부의 과도한 방역책이 결국 계란, 닭·오리고기 등의 수급불균형을 가져와 소비자 물가 폭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가금산물 소비자 가격 폭등 원인을 단순히 ‘AI가 발생해서’라고 단정·호도하는 무례를 단장 멈추고, 가금산업 발전에 역행하는 현재의 방역 지침을 제대로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하면서 가금단체들 에게는 이같은 현장의 상황들을 정부·여당과 국회 관련 상임위에 잘 설명해 더욱 알려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 후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실에 ‘가금단체 AI 피해 손실 보상 대책’ 등의 내용을 담은 요구서를 전달했다.

협회는 앞으로 청와대와 국회 교섭단체, 비교섭단체 대표 및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을 연달아 방문해 정부의 과도한 AI 방역책으로 인한 가금산업 종사자들의 억울한 현실을 알리고, 이를 통해 보완책 마련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AI 방역조치 조정 등 건의문 위원회에 전달 오리농가 시급한 과제들에 대한 조속한 개선 촉구



한국오리협회(회장 김만섭)는 2월 3일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정현찬 위원장과 만나 오리농가 시급한 과제들에 대한 조속한 개선 촉구했다.

이날 협회는 ▲가금농장 AI 발생과 철새에서의 AI 검출에 따른 예찰지역 내 오리 반입제한에 따라 입식이 지연되는 육용오리 농장에 대한 소득안정자금 지원과 함께 불가피하게 새끼오리를 폐기하는 부화장에 대한 피해 보상 ▲육용오리 살처분보상금 현실화 ▲예찰지역 내 농가와 마찬가지로 재입식이 지연되는 예방적살처분 음성판정 농가에 대한 소득안정자금 지원 ▲지자체별 반입금지 조치 철회 ▲일주일에 2번 이상 시행 중인 오리농가에 대한 AI 정밀검사 기간 조정 ▲AI 최초 발생 이후 30일 이상 경과한 방역지역의 조속한 이동제한 해제 ▲SOP 등에서 오리만 입식을 금지하는 닭과 다른 방역 조

치 개선 ▲오리농가들이 현실적으로 이행이 불가능한 각종 AI 방역조치에 대한 재검토 ▲AI 발생농장에 대한 살처분보상금 감액을 비롯한 과태료 처분 및 고발조치 등 이중처벌 문제 조정 ▲전국적으로 AI 바이러스 오염을 초래하는 현행 정부의 철새도래지 AI 방역조치 조정 등 건의문을 위원회에 전달했다.

이날 면담은 한국오리협회 김만섭 회장 요청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한국오리협회를 포함한 5개 가금생산자단체가 참석했다.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정현찬 위원장은 한국오리협회 등 가금생산자단체 소속 농가들의 피해 상황과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AI 발생으로 인해 가금농가들이 겪는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위원회가 관심을 두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면 질의 등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오리 도압제경비 990원으로 인하

도압제경비 기존 1,200원에서 210원 인하



협회는 지난 1월 18일 도압제경비에 대한 적정성 검토 및 향후 적용방법 결정을 위한 오리 도압제경비 적정성 검증 위원회 개최했다. 회의는 온라인으로 오리 도압제경비 조사내용 설명, 조사 내용 적절성 검토 및 심의 순서로 진행됐다.

협회는 '시·구지역 방역 개선대책(축정과, 17.4.20.)' 중 살처분 보상금 지원 방식 개편 관련 가금류 보상금 평가액의 객관적인 산정기준의 필요성과 최근 국내 오리업체 계열화비율이 97%에 달해 도압제경비에 대한 재분석을 요청함에 따라 2020년도 업체별 도압제경비 실제 항목 분석 및 전문가 회의를 통한 도압제경비의 적절성을 검증하기 위해 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 결과 오리 도압제경비는 기존 1200원에서 210원 인하한 990원으로 확정됐다. 의결된 도압제경비는 2월 1일부터 적용된다. 또한, 이날 의결된 도압제경비는 2020년도 축산물 유통실태조사 도압제경비 결과 활용, 2021년도 오리 산지가격 환산에 필요한 도압제경비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협회는 지난해 12월 오리 산지가격 산출 기준의 현실화, 축산물 유통정보조사 방법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농식품부에 검토 요청했다. 이에 지난 1월 8일부터 13일까지 농식품부·오리협회·축평원 공동 현장 실사를 실시했으며 조사 결과 기준 전국 8개소 도압제경비 평균 990원/마리로 산출됐다.

도입제경비 하락원인

도입마릿수의 증가로 인한 제경비 하락



계열화비율 증가



오리 임도축 비율 감소 및 계열 자체물량 증가로 도입제경비 감소
계열업체에서 직접 도입하는 물량 증가로 인해 마리당 도입비 감소

규모화 및 자동화

계열업체에서 도입장 증축 및 신축으로 도축공정의 자동화 확대



긴급 이사회 개최

살처분 보상금 및 소득안정자금 축사시설 개편 TF팀 논의



협회는 지난 2월 22일 최근 오리 수급 동향을 보고 받고 △살처분 보상금 및 소득안정자금 △제13대 임원선출 방안 △2021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주요 계획 중 축사시설 개편 TF팀 구성 등에 관한 논의를 위해 긴급 이사회를 개최하고 원안 의결했다.

(제1호) 살처분 보상금 및 소득안정자금 등 논의는 협회에서 농식품부에 건의 및 조정한 5,788원(기존 5,044원)에 대해 수용하며, 향후 살처분 가축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고시개정, 3km 예방적 살 처분 농가 보상금 지급기준 개선,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 SOP 개정 등 추진하기로 했다.

(제2호) 제13대 임원선출 방안에 대한 논의 결과 시, 코로나19 발생 등으로 인하여 선거일은 추후 이

사회에서 결정하고 먼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임원선거 업무를 추진하기로 했다.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이창호, 위원 전영옥, 김성수, 박영배, 김재익이다.

(제3호) '21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주요계획(축사시설 개편) TF팀 구성은 TF팀 구성원 중 협회인원 추가요청 의견에 따라 내부위원 총 5인으로 구성됐다.

이외에도 이사회에서는 불합리한 방역 시행지침과 관련해 농가와 협의하여 해소 방안을 도출해 낼 것이며 가축방역관의 개인정보동의서 수집관련 우려 사항에 대해서도 농식품부에 관련 의견을 전달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